

이윤우선이 김용균 씨를 죽였다! 그래도 문재인은 친기업 기조 선언!

故김용균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오후 3시 서울파이낸스 앞

※ 추모제 후 故김용균 어머니와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김용균 씨 죽음과
발전 민영화의 궤적

4~5면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나

5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노동개혁 시도
경계해야 한다

2, 3면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 비판
알맹이 없는 일자리위원회

6, 7면

불법촬영 항의 운동
무엇을 이뤘으며,
다음에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8면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을
0퍼센트라니”

7면

카카오 vs 택시 갈등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온라인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현장 안착”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고통 해소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월 17일 집권 첫 합동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의사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악의 추진 시기도 코앞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것이 약간 늦춰진다 해도 1~2개월 정도다. 최저임금 개악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총은 연말연초 개악 추진에 맞서 시급히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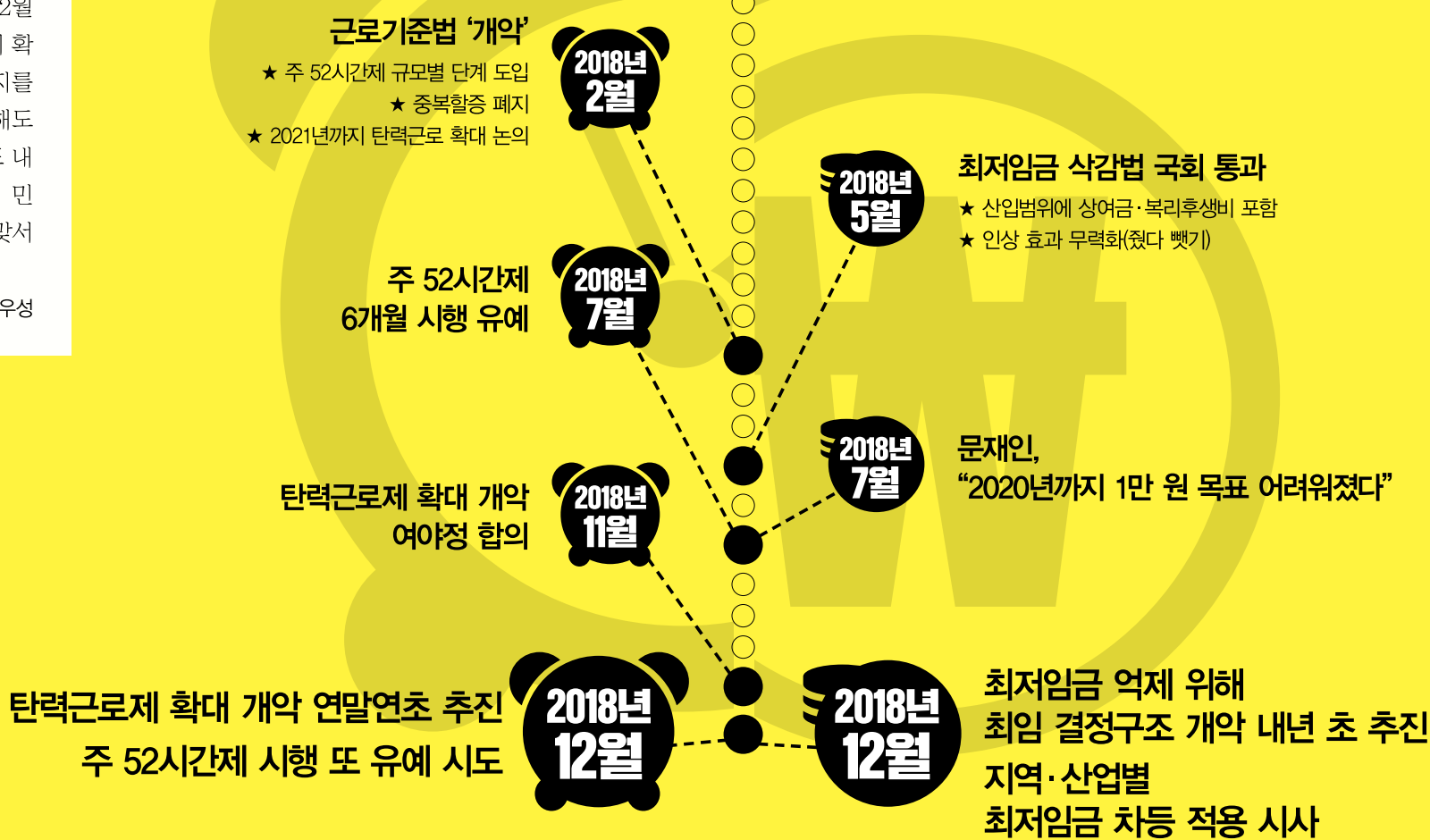
박설, 장우성

노동시간 단축 공약 후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50만 개 일자리 창출
임기 내
연간 1800 노동시간 실현

최저임금 인상 공약 후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으로 건설·운영하라

公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주~서울~화성을 잇는 GTX A노선은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양주~서울~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GTX는 일반 철도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급행철도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여 분 만에 올 수 있다.

이는 출퇴근을 위해 긴 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야 하는 노동계급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을 위해서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철도를 이용한 대중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민자 사업

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GTX A노선의 우선협력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 사업은 자본의 수익성을 위해 철도를 운영하므로 요금 인상, 안전 사고, 서비스의 질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하철 9호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에 서울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가 반발 때문에 철회한 바 있다. 지하철 9호선은 혼잡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 ‘지옥철’로도 불린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운영되다 보니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최소한의 차량 대수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인력도 부족해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직원 1인

당 수송 인력이 16만 명인데 9호선은 26만 명에 이를 정도이다. 이는 구의역 사고나 외주화된 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보듯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자 사업으로 정부 재정이 크게 절감되는 것도 아니었다. 민간 기업의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자로 운영되던 인천공항 철도는 정부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 2009년에 철도공사가 다시 인수해야 했다. 이후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수익성 강화 조치를 취하며 다시 민간에 매각했다.

그래서 정부는 지하철 9호선이나 인천공항철도와 달리,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GTX A노선 건설에도

정부는 총 건설 사업비 3조 2200억 원 중 1조 5500억 원을 지원한다. 여전히 민간 자본의 수익성을 높여 주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민자 사업 허용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에게 확신한 돈벌이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 민자 사업은 대형 건설사와 관련 사업에 투자한 자본가들에게 안정적 수익처를 제공할 것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은 일시적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투자로는 이윤을 저하 위기에 빠져 있는 자본주의

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반면 철도를 민영화하는 고통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아직 많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공개된 것만으로도 GTX A 노선의 요금은 현재 지하철의 두 배나 된다. 고령자 무료 승차 제도 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박원순과 이재명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자체 장들은 GTX 추진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민자 사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지역구가 고양시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철도노조 등 진보진영이 GTX의 민자사업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선영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인가

12월 17일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고 야당들의 요구안 중에 한두 개씩 골고루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소수 정당들(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파 야당들에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기관 노조들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합의 문구를 보면 무게감이 다르다. 선거제도 개혁은 “검토한다”이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등은 “처리한다”이다.

입각에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열흘 남짓인 임시국회 기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과 ‘못할 것’이다는 다른 얘기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이미 청와대-민주당-자유한국당 등이 올해 처리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방침에 반발하자, 여당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경사노위의 합의에 민주노총을 포함시켜야 해서다.

이번에 여당은 우파 야당의 연내 통과 압박에 재차 이행각서를 써 줬다. 그러나 노동자들과의 약속은 2년이 다 돼 가도록 감감무소식이거나 포기했다.

대놓고 기업 존중으로

정부·여당은 우파 야당(전임정부 세력)과 기업주 환심 사기 경쟁을 하는 듯하다. 12월 17일 정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문재인은 친기업·반노동을 분명히 했다.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장관들,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기타 장관급 기관장 등 정권의 주요 간부들이 모여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활력”이 정부의 새로운 기조로 제시됐다. 경제 활력은 기업 존중과 투자 활성화의 목적으로 제시된 말이다. 이는 노동 존중의 공식 폐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박근혜가 망친 걸 원상 회복하고 공약을 지키라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던 노동자들이 병원에 실려가도 모른 채하던 문재인이 한 말이다.

지금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 때문에 투자 전망이 밝지 않아서 투자

를 미루거나 주저한다. 그러므로 기업 투자 활성화는 정부가 적정 수익성을 기업들에 보장하는 정책들을 펴는 뜻이다.

직접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세금 삭감, 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지원뿐 아니라 알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 완화, 임금 및 노동비용 억제 정책이 뒤따를 것이다.

실제로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정책으로 의료 영리화, 공공 시설의 민간투자 전면 허용, 친기업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임금체계 개악(직무급제), 최저임금 개악(또는 인상 억제) 등도 주요 추진 정책이다.

문재인이 말한 “투자 걸림돌 제거”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한웅큼 가져다 쓰겠다는 얘기다. 우회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 문재인은 우경화를 비판했던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 발표했던 정책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공공시설 민간투자 전면 허용이나 보건·관광 등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서비스업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할겠다는 약속에서 민간 투자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로 후퇴한 것이다.

기업이 고임금을 투자 걸림돌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 걸림돌을 제거해 주고 나오는 일자리가 양질의 리가 없다. 가뜰이나 산재 사망이 많은 건설업에서 외주화의 위험성이 줄어들 리도 없다.

문재인은 경제·노동 정책에서만 후퇴한 게 아니다. 적폐 청산도 용두사미가 됐다. 사법 농단, 기무사 세월호 사찰 등이 폭로됐지만, 지금 사법 개혁은 ‘사법 농단’이 됐다. 전 기무사령관 중 이재수는 자살했고, 조현천은 사실상 망명 상태다. 수사가 될 리 없다.

여권 핵심부는 당내 좌파인 이재명 경 기지사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친노조를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격함으로써 적폐 청산 동력도 스스로 약화시켰다.

지금 국회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말고도 최저임금 동결 등 개악 법안들이 여럿 계류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속도를 볼 때, 노동자 운동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 개악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을 고무하면서 이런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우파 야당(전임정부 세력)과 기업주 환심 사기 경쟁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재계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기업 투자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기업주들과의 관계가 찰떡궁합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재계는 자유한국당을 선호해 왔다. 전경련은 우익 단체들의 주된 후원자였다. 재벌들이 적폐로 불리는 동안에도 자유한국당은 재계를 일관되게 대변해 왔다. 이제 우파와 기업주들은 문재인에게 ‘적폐 청산의 중단’을 요구한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여야 합의로 노동개악들을 통과시켜도 기업주와 문재인 사이에 여전히 긴장이 있고, 여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가령 정부는 이재용을 풀어 주고 인도와 평양 등지에 동행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은 질질 끌며 삼성을 압박했다. 재계 존중과 민간 투자 독려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저

녁 뉴스 한켠에는 재벌 부패 수사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삼성 등 재계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촛불의 환심을 사려고 포퓰리즘적 연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업주들의 마음을 사려고 더 반동적인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은 집권 2년차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비정규직 약법, 노조법 개악을 동시에 들고 나왔었다. 노무현은 집권

말기에도 한미FTA, 비정규직 약법, 제주 해군기지 추진, 국민연금 개악 등 최악의 우파 정책들을 강행했는데, 바로 그때 임기 초에 검색됐던 남북관계를 풀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운동 내 혼란이 계속됐음은 물론이다.

지배계급이 분열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노동개악에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노동운동은 현 정치 상황의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며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문성 <노동자 연대> 편집팀을 대변해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업데이트됩니다.

- ★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 규제 없었다
- ★ 계속되는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 ★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아닌 제국주의와 연관
- ★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 2018년 돌아보기 경제, 국제, 한반도
- ★ 한국가스공사 해고 협박하며 자회사 강요 중
- ★ 정부의 한부모 정책 턱없이 부족하다
- ★ 지하철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직장 □노조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신정환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독점 체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1980년대 말부터 한전의 주식회사화와 정부 지분 일부 매각 등의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경영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발전 부문 분할·매각 추진과 노동자 저항

본격적 추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는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이 지연된 한국통신(KT), 포항제철(POSCO),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등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가 완료됐다.

IMF가 구조조정,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등을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내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이는 결과기도 하다. 민영화를 통해 한편에서는 국가 지출을 줄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자 했다.

김대중 정부는 발전 부문을 6개 한전 자회사(5개 화력발전자회사, 1개 수력·원자력자회사)로 분할했다. 장차 민간에 매각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02년 2월 25일 발전·가스·철도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했다. 공공 3사 파업은 김대중 정부에 타격을 줬다. 이 투쟁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일시) 중단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각도로 모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존 발전 공기업들의 민영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2008년 4월 이명박은 발전사 6곳 중 우선 2곳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초부터 시작된 촛불 시위로 인해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이 촛불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뿐 아니라 민영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광범한 정서를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퇴진 촛불’ 시위로 박근혜가 먼저 물러났다.

민간 발전 시장과 외주화 확대

그러나 발전 부문 민영화가 완전 중단된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들은 신규 발전 시장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늘



12월 13일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김용균 씨 또래 청년들

리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도입해 왔다. 지금은 전체 발전 시장의 26퍼센트를 민간 발전회사(포스코, SK, GS 과점 형태)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 정부는 분할된 화력발전사 주요 업무들의 외주화(일종의 민영화로, 한전의 발전 부문 민영화와 구별 짓기 위해 외주화로 표기)도 확대해 갔다.

발전사는 원청이 해 왔던 석탄 공급과 환경 오염 방지 설비의 운전 및 발전소 설비 정비 등의 업무를 점차 외주화했다.

김용균 씨가 입사한 한국발전기술도 이 과정에서 성장했다. 한국발전기술은 2011년 남동발전의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2014년 태광실업에 매각됐다.

노동조건 악화

발전사 분할·경쟁과 외주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악

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반대하고 원청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발전 분할이 진행되기 전인 1990년대 말 당시 한전 소속 발전 부문 노동자는 약 1만 6000명이었다. 그 후 발전소들이 늘어났음에도 2017년 현재 발전 5사의 정규직은 1만 2000여 명이다.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8000명 가량이다.

경쟁 강화로 정규직들도 내부 경쟁이 강화됐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발전사들의 정규직 임금 체계를 보면, 4~5급을 제외하면 호봉테이블이 없고 업무평가에 의한 차등적인 급여가 대폭 강화됐다.

예산 절감을 위한 외주화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저임금(정규직 대비 55~60퍼센트)과 부족한 인원에 따

른 고된 노동과 장시간 노동(한 달에 적게는 169시간에서 많게는 213시간의 연장·야간근무)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발전소에서는 무려 346건의 산재사고가 있었으며 337건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와 발전사들은 국가 주요 시설인 발전소에 대한 필요한 인력 증원과 시설 개선·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다. 발전소를 “살인 병기”(김용균 씨 어머니)로 만들어 놓고는 그 위험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2인 1조로만 운영됐어도, 김용균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고를 낸 하청업체에 원청이 불이익을 주는 제도 때문에, 더 많은 사고가 은폐·축소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해 집중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재사망 대폭 줄이기)를 발표했다.

재계는 반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후퇴했다. 핵심 취지인 외주화 금지와 사용자 처벌이 약화됐다. 현재 법보다 낫다는 이유로 정부 개정안을 지지하기가 머쓱한 이유다.

그런데 더 나은 관련 개정안들은 이미 20대 국회 초기에 많이

제출돼 있다. 총선 직후에 서울 구의역 참사가 벌어진 때문이기도 하다.

정의당 심상정, 고(故) 노회찬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각자 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흔히 기업살인법이라 불리는 특별법들도 있다. 산재 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 사고 예방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이 법안들을 환노위원장 권한으로 묵혀 온 장본인이 바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다.

정부안보다 정의당과 민중당이 내놓은 법안들이 훨씬 낫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태안 발전소 참사에 대한 항의 운동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

문재인도 책임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반대는 단지 고용 형태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이 비용 절감 명목으로 위험 관리의 책임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기 싫어서 해당 업무에 정규직도 안 쓰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본질적으로 이윤체제의 우선순위에서 비롯한 문제다. 이 체제의 수호자인 국가와 그 임무에 맞게 정부를 운영하는 문재인에게 큰 책임이 있는 이유다.(확대경제장관회의에 거의 모든 장관들이 포함된 것은 행정부 전체가 임무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보여 준다.)

정부가 지난 1년 반이라도 안전을 우선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제 추진하며 단속하고 명령했다라면, 적어도 태안화력발전소 같은 공기업에서는 참사를 방지하는 개선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 미비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였다.따라서 이 쟁점은(꼭 필요한 법들이지만) 입법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다. 광범한 대중 운동이 중요하다.

김문성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동안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투쟁해 왔다. 발전노조도 이를 지지해 왔다.

그런데 정부와 발전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연료·환경 설비 운전 및 정비 업무를 필수공익유지업무로 지정해 놓았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필수 업무라며 파업권은 봉쇄하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고 정규직 전환에서는 제외했다. 급기야 죽음도 방지하는 뺨뺨함에 치가 떨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사고 7일 만에 내놓은 정부부처 합동대책이나 19일 정부·여당이 연 긴급당정대책회의의 결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핵심 문제인 인력 충원과 외주화 중단 등은 약속조차 없다. 정규직

전환 대책은 협의체 구성 지원에 불과하다.

19일부터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그동안 핵심 조항들이 약화돼 기대가 높지 않다. 관리 책임만 늘지 외주화 금지나 강한 처벌은 어렵다.(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기사를 보시오.)

사실 문재인 자신이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안전·생명 업무 중시 정책만 의지를 갖고 실행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정부의 진정한 의지가 없으니 사측도 변한 게 없다. 사고 컨베이어 벨트는 멈췄지만, 더 위험하다는 1~8호기 컨베이어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대통령의 책임을 말했다. “[발전사는] 공기업이고 정부가 운영하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외주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규모 있는 시위를 지속·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정환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신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지난해 11월 19일,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도 김용균 씨(산재로 숨진 발전소 하청 청년 노동자)처럼 혼자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에 끼여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값싸게 착취하는 제도인 현장실습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인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족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건 원인 규명이 아니라 공장 재가동을 우선했다.

이민호 학생이 혼자서 작업한 것도, 표준계약서와는 다르게 하루 11~12시간씩 일한 것도, 모두 규정 위반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말단 교사만 경징계하는 걸로 마무리했다.

이민호 학생 아버지의 말처럼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고 처벌받거나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당시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래 6개월이었던 현장실습 기간이 3개월로 줄고 이름을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뀐 채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도리어 개악도 됐다. 노동이 아닌 교육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최저임금 대신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

학습 중심 현장실습?

그 결과 임금이 반으로 줄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현장실습생 10명 중 7명이 월평균 12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는 10명 중 8명이 월평균 100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다(민주당 조승래 의원).

일부 진보정당은 제도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장실습은 근본에서 청소년을 열악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쓰는 정책이다. 이를 고쳐서 사용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현장실습 폐지와 함께 진정한 개선책을 추진돼야 한다.

학생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열악한 저질 일자리에 매이지 않게 하려면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제공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지금처럼 특성화고를 저임금 노동계급을 양산하는 학교



제주도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추모 집회 참가자

로 이용하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년간 고졸 인력은 113만 명 부족하지만 대졸자는 75만 명 초과 공급된다고 대학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보다는 고졸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열악한 중소기업

에서 6개월 이상 버티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2~3년을 근속하면 혜택을 주겠다고(청년내일채움공제)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일을 참고 버텨야 당근을 주겠다는 식이다.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학생, 청년 노동자들이 꽃다운 나이부터 죽어나가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기업 이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자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정선영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 인력 부족에 허덕여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구의역 김 군과 김용균 씨 유품에 똑같이 있었던 컵라면을 보면 마음이 더욱 미어진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하청업체로) 가게 된 이유는 고용이 안 됐기 때문이다. 서류를 들고 반년 이상 해마다 찾은 곳이 여기였다.”

많은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받는다. 취업을 해도 열악한 일자리이기 일쑤다. 청년(보통 15~29세를 지칭)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기준 34.9퍼센트에 이른다. 첫 일자리를 1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얻는 청년은 2016년 기준 22퍼센트다. 이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거나 학자금을 갚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많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일

단 들어가 경력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좀더 안정된 일자리로 이직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률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정규직 전환이나 양질의 일자리로 이직이 쉬운 게 아니어서 또다시 좌절을 겪곤 한다.

김용균 씨도 좀더 큰 공기업을 한국 전력에 정규직으로 취직하고 싶어 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결국 본가인 구미에서 멀리 떨어진 태안까지 가서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구했다. 그리고 입사 두 달 만에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

취업 청년의 겨우 37퍼센트만이 첫 일자리에서 1년을 머무른다. 이직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건 불만족이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8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2017 통계청).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고, 같은 해 민주노총이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 표준생계비 255만 원에 견주면 턱없이 낮다. 청년들은 이런 여건에 위험한 환경까지 감내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터진 날 ‘일자리는 질보다 양’이라고 선언했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다. 하지만 실상 그 대책은 전임 우파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정규직화 요

구와 책임을 외면하는 동안 안타까운 죽음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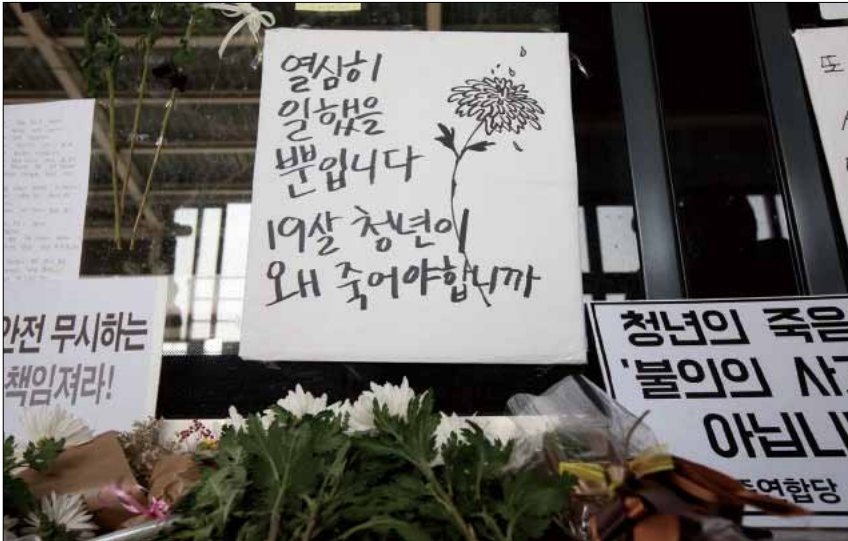
경제 위기와 산업예비군

청년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가들이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더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런 공격에 ‘해고 비용’이 적은 청년층은 더 취약하다.

기업주들은 숙련도가 낮은 청년을 해고하고 기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게 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경제 위기 직후인 1998년,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는 7.7퍼센트 감소한 데 비해, 청년층은 17퍼센트나 감소했다.(이병희, ‘경제 위기 이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를 보면, 1996년에는 신규 채용이 전체 채용 규모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2년엔 5분의 1로 감소했고 그 자리를 경력직 채용이 차지했다.

더 근본적으로 마르크스가 말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이 실업을 더 강화한다. 기업들은 이윤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생산적인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노동절약적 기술을 도입한다. 이제 더 적은 노동자라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기업주들은 기



자본가들은 청년 노동자를 값싸게 쓰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존 노동자를 해고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실업자를 “상대적 과잉인구” 혹은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다. “산업예비군” 중 일부는 취업이 상당히 불규칙적인 노동자 집단이다.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저임금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과잉인구의 생산은 이미 취업한 노동자들의 축출이라는 훨씬 눈에 띄는 형태를 취하거나, 추가적 노동인구를 통상적인 통로를 통해 흡수하는 것이 더욱 곤란해지는 형태를 취한다.”

“취업한 노동자의 축출”은 기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기껏 훈련시킨 기존 숙련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아까운 데다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기업주들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후자의 방식, 즉 청년층 등 추가적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방식

을 택하기도 한다. 또한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경기 변동에 따라 훨씬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자리로 내모는 것이다.

이런 산업예비군의 존재 덕분에 기업주들이 기존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기가 수월해진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노동계급 일부에게 과도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강요된 나태에 빠지게” 하고, 또 그 반대로 “산업예비군 때문에 취업자가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취업한 청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윤을 위해 기존 노동자를 쥐어짜면서 청년들에게 실업과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기업주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 죽음의 책임이 있다.

양효영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싼 대신 질 나쁜 재료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재료를 덜 쓰고, 재활용할 수 없는 물품을 재활용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권유하고, 의료비를 높게 책정할 것이다.

제주에서 영리병원이 문을 열면, 인천, 창원 등 경제자유구역 8곳에서도 합법적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를 요구할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영리병원을 더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영리병원을 허가한 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당장의 소나기를 피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은 일언반구도 없다.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필수 허가 조건을 충족시켜 준 공공병원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MOU를 철회하기만 해도 녹지국제병원을 쉽게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되레 한술 더 뜨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고용군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도로, 항만, 철도

등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전면적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입법화하고, 삼성 등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원격의료도 도입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의료 영리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자 원희룡은 힘을 얻고 있다.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제주관광협회 등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지지하게 하고, 제주 지역 일간지들을 영리병원 지지 광고로 도배하고 있다. 제주의 우파 세력들도 영리병원 지지로 결집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 관광객

만 진료하므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악영향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 관광객 진료만으로는 녹지국제병원의 이윤 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내국인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이다. 원희룡이 장담하는 바와 달리, 이를 막을 수 있는 의료 법적 근거는 없다.

문재인과 원희룡은 영업 비밀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현직 복지부장관들은 뻔뻔하게도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의 실소유주가 국내 병원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금 제주 영리병원 철회 요구 서명이 3일 만에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는 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제주도와의) 노정교섭 요구 파기를 선언”하며 “이후 제주도와 일절 대화를 중단”하고 “해결이 필요한 노동현안과 노동정책은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옹계 얘기했다.

2014년 2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영리화 질주에 제동을 걸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는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 의료 영리화,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함께 맞서기 위함이다.

장기화된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본을 편들기로 한 이상, 문재인과 원희룡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운동 측은 이들에 맞서 더욱 단호하고 일관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재현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창호중·김은영

일자리위원회가 12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②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③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얼핏 보면 꽤 개혁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나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해 온 것이고, 후자는 공공운수노조 등이 최근 ‘최소한’의 조치로 요구해 온 것인데 이를 전문위원 다수 의견으로 명시했다.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방안들이 의결된 것도 꽤 개

혁적인 일자리 방안이 도출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데 한몫했다. 사회적 합의의 효과인 것이다.

그러나 위 방안들의 내용을 뜯어 보면 진전된 알맹이 없이 기존 발표들을 재탕한 수준인데다, 그런 내용조차 실행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일자리위원회의 합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도 내놓은 정책들에 예산이나 재원도 분명히 반영돼 있지 않다.

즉, 실제 시행하려면 어차피 정부 부처의 결정이나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 민영화, 규제 완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완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 등 — 에 비춰 볼 때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적절하게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알맹이 없는 방안에 합의해 줬다

사진 출처: 일자리위원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방안 — 대폭 후퇴한 정책 그대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가장 후퇴한 최근의 안을 그대로 반복했다.

첫째, 일자리 창출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6만 3000명만 고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몇 명을 고용할지 계획도 없다. 시범사업 예산도 애초 계획보다 8억 원 삭감됐다.

둘째, 민간 위탁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공공립시설과 위·불법 발생,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만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된다.

신규 공공립시설 확충 규모도 부족하다. 그조차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면 실제 공공립 보육

시설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예정보다 한참 늦춰지고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원은 추가 재정 지원 없이 현행 수가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사실상 민간 운영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하겠다는 경영실적과 업무성과 평가 등은 수익성 압박을 더욱 부추겨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노동자 임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표준임금제를 도입하고 직무급제와 연관시키려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노동자들은 “도대체 민간 위탁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하고 불만을 토로한다.

문재인 정부는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의지가 없다.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은 종이가 아까울 정도로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받은 기존 정책들을 나열하거나, 심지어 보건의료 일자리와 별 관계없는 정책도 늘어놓았다. 예컨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퇴직경찰 등을 금연구역으로 총원하는 계획을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에 담아 놓은 것을 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 인력 대책은 올해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재탕한 수준이다. 당시 본지는 물론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등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한 바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등은 보호자나 보호자가 고용한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

호보조인력만으로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의료 서비스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이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려면 인력이 충분히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기준이 너무 낮아 오히려 노동강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민간 병원이 압도적(95퍼센트)인 한국에서, 이를 강제할 인력 기준 등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인력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하나마나한 얘기다.

오히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추진, 제약·의료기기 임상시험 완화 등 의료 영리화로 나아가고 있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고용 규모가 적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해 온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 거론된 것 정도이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은 정부가 병원의 인력 기준을 정하고 일정하게 규제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조차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 마련 “검토”라고 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뒀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다수가 이 법에 동의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와 정면 충돌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동안 한 차례도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조차 논의된 적이 없다. 두 주류 정당이 의도적으로 배제 온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 병원 노동조합이 투쟁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노동자연대가 12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을 약간 보완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개선된 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죄다 나쁜 것들 중 그나마 덜 나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개악이라 해야 정확하다.

첫째, 정부와 주요 언론들이 현행 유지라고 부르는 ①안은 사실 연금 삭감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기 평균소득의 45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2028년까지 매년 0.5퍼센트씩 삭감되도록 돼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는 개악이 이뤄진 바 있다. 그후 반발을 약화시키려고 매년 조금씩 깎도록 했다. 이 삭감을 멈추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에서 ‘현행 유지’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연금이 앞으로 계속 삭감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안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처럼 연금을 계속 삭감하되, 2022년 이



나쁜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문재인식 연금 ‘개혁’

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기초연금은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삭감폭이 5퍼센트나 된다. 다른 한편, 인상되는 기초연금 10만 원은 평균소득의 3퍼센트로, 삭감분에 못 미친다.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최저 소득층의 경우 애당초 국민연금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어, 개선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말이다.

셋째 안은 국민연금을 더 삭감하지 않되, 보험료를 33퍼센트(소득의 9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상하는 안이다.

넷째 안은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11퍼센트 인상하고(소득의 45퍼센트

에서 50퍼센트로), 보험료는 44퍼센트(9~13) 인상하는 안이다.

셋째 안과 넷째 안은 연금을 삭감하지 않거나 조금 인상하지만, 보험료를 그보다 훨씬 많이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단순히 개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업주들에게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보험료 부담 비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린다. 소득의 대부분이 생계비인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는 그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부양 부담을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정부와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리라고 주장해야 한다.

요컨대, 이번 정부안은 올해 8월 국민연금제도개선위 등이 발표한 큰 반발을 샀던 안에서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당시 문재인은 ‘나도 못 받아들이겠다’며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연금 삭감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애당초 개선된 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국가의 “지급 보장”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은 “최저노후생활보장”을 담당하고 “적정 노후생활비”는 사적 연금에 내맡기는 조처는 전형적인 신

자유주의적 개악이다. 사적연금은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뿐 진정한 복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문재인은 단지 경우의 수만 늘려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초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공을 들이는 듯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정책 조합 나열로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다만,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정부도 인상분만큼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고 해, 조건부 보험료 인상 허용 입장을 낸 것은 아쉽다.)

민주노총 등이 포함돼 있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정부의 의지와 책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분명히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 아쉽다.

문재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국민연금 특위)를 설치하고 민주노총을 여기에 끌어들여 개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민연금 특위에 참여하려 한다면, 이런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꺾는 효과를 낼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회 법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연금 특위에서 조그마한 개선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삭감될 수도 있다.

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진정한 연금 개혁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 쟁다 뺏기, 노동시간 줄이는 시늉하다 늘리기 등 문재인 정부의 배신과 기만에 맞선 투쟁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 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1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왔다.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전환이 미뤄지거나 심지어 이후 전환 부담을 줄이려고 해고(계약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화순 병원 등 전남대병원 산하 4개 병원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는 600명이나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고 규탄했다.

파업 출정식에서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병원을 비판하며 투지를 다졌다. “정부도, 전남대병원도 ‘비정규직 철폐’라는 사회적 여론 앞에서 생색내기만 할 뿐 실제로 정규직 전

환의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제 정부와 전남대병원에 대한 미련을 거두고 우리 스스로의 투쟁으로 정규직을 쟁취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기자회견문)

전남대병원 측은 올해 9월 임금단체협상에서 “간접고용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열어 정규직화 대상, 시기, 조건 등을 논의하자며 시간만 끌어 왔다. 여러 공공기관들에서 그랬듯이, 노·사·전 협의체에서 자회사 방안, 무더기 전환제외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자회사 전환이 정규직화라고 우기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방침이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싸워야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서울시·공공병원 사용자와 합의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도 같은



정부와 병원 측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쳤다

문제점을 보여 준다.

보건의료노조 집행부는 이 합의가 “자회사로의 고용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는 “자회사 배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 직접고용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 말은 실질적 적용 기준이 아니라 “이론적 측면”을 의미하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국립국어원). 정부와 사용자들

이 ‘원칙은 원칙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집행부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구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이 아무리 장기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차별적 임금체계 방안이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온 임금·처우 개선, 실질적 정규직화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등 노동조합들과 노동자연대 등 좌파 노동운동 단체들은 이 합의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등 차별을 고착화를 낼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측 발표자도 별도 임금체계가 차별적이고, 저임금 체계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방안 등을 정규직화로 둔갑시키고, 돈 안 들이는 말뿐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속에서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줄줄이 자회사 방안을 추진했다. 국립대병원들도 지금 자회사 방안을 만지작거리며 기존 합의를 깨무시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보건의료노조는 이참에 잘못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를 폐기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장호중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정진희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집회 사흘 전인 12월 18일 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밝혔다.

불편한용기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진영·보수진영 할 것 없이 남성 권력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진은 여성이 말하는 여성의제가 곡해되지 않고 진의를 전달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의 이유로 이 운동에 대한 반발(백래시)을 꼽은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여러 반발에도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3차 집회 뒤 언론들과 진문 인사들의 마녀사냥이 있었지만 이 운동에 대한 지지는 더 늘어났다. 그래서 8월 4차 집회는 집회 장소를 혜화역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정점을 찍었다.

6차 집회 구호문에 문재인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구호가 있음이 미리 공개됐다. 그러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민국 웹하드 대표이사 (청와대 청와대)”, “알탕 카르텔 문재인 때려쳐라” 같은 문구가 특히 반발을 낳았다.

이 구호문이 공개된 직후, 불법촬영 항의 집회 카페와 여성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카페들에서 6차 집회 구호가 “과격하다,” “문재인 탄핵 요구가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때려쳐라” 같은 구호는 6차 집회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런 데도 새삼 논쟁이 됐다. 이는 최근 양진호의 검·경 로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부에 대한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합리적 의혹

불편한용기가 웹하드 카르텔과 문재인 정부를 관련짓는 것은 괜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혹이다. 최근 양진호의 검찰과 경찰 로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웹하드 업체들의 협회인 DCNA의 전직 간부들이 민주당원들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부패 전력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일



한국 여성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8월 4일 광화문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은 많을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촬영물을 대거 유통시켰는데 그동안 거의 제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심위는 올해 새로운 필터링 시스템 개발 사업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민간 필터링업체에 맡겼다.

정부와 정치권, 웹하드 카르텔과의 관련성 의혹이 커지는데도 주류 언론은 대부분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구호를 내놓았다.

동력

이 운동은 지난 4차 집회를 정점으로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5차 집회는 수만 명 규모로 여전히 컸지만 4차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주최 측은 경찰에 낸 집회신고서에 이번 집회 규모를 5천 명(5차 집회 때는 1만 5천 명으로 신고했다)으로 적었다.(실제 참가 규모는 신고 규모보다는 많았다.)

이 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이 집회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일쟁점 운동이 갖는 한계와 관련 있는 듯하다. 불법 촬영·유포

범죄 처벌·단속이라는 단일쟁점으로 7개월째 항의 운동을 해 왔다. 단일쟁점 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급속도로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지난 10월 6일 5차 집회를 앞두고 필자는 〈노동자 연대〉261호에 이렇게 썼다.

“이 운동은 어떤 계기를 얻으면 다시 성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일쟁점 운동(광범한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를 깔고 있지만 불법촬영, 편파수사라는 단일 쟁점의 항의운동이다)은 지속 기간이 길지 않다. 대중의 분노와 싸움 자신감이 클 경우 단일쟁점 운동은 매우 빠르게 타올랐다가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협소함과 정치적 전망 부재로 확장성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지배자들이 그 운동을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양보나 양보 제스처를 취하면 스멀스멀 동력이 분산되게 된다.”

올해 5월 급부상한 이 운동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대중적이고 전투적인 여성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배자들은 이 운동에 일부 양보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5차 집회 직후인 10월 17일 주최 측과 2차 간담회를 했고, 그 뒤 ‘몰카 제왕’ 양진호와 웹하드 업체 임원들, 헤비 업로더 등을 구속했다. 그리고 국회는 11월 29일 불법 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양보는 부족하다. 불법촬영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수익을 몰수

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일쟁점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도 그 뒤 쉽게 반격에 부딪힐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

약점

지난 5차 집회 때 이 운동의 동력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였지만, 불편한용기는 이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 배제’라는 아나키즘적인 방침 때문에 운동이 직면한 도전을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

남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주최 측의 분리적 페미니즘도 운동의 전망을 열어젖힐 수가 없었다. 남성 비하적 표현들을 거리낌없이 쓴 것은 여성 차별에 대한 반발의 표현으로 너그럽게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적대시하는 태도는 평범한 남성들의 반발을 사기 쉬웠다.

젊은 여성들이 이 운동에 대거 동참한 것은 위마르식 정치보다는 이 집회의 투쟁적·급진적 분위기 때문이다. ‘여성계’ 지도자들과 달리, 입법부·사법부·행정부들 거침없이 비판한 게 분노한 젊은 여성들의 정서와 잘 맞았다.

그러나 정세가 좋고 여성들의 자신감이 높을 때는 운동 주도자들의 정치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한동안 성장할 수 있지만, 운동이 일정 국면을 지나서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처하면 한계가 드러나는 법이다.

주최 측이 이번 집회를 앞두고 발표한 글을 보면, 여전히 기성 질서를 거침

없이 비판한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자 공범”으로 “한국 남성을 규탄한다.”

만약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고 ‘여성혐오’에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 운동의 전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모든 남성들이 카르텔을 맺어 여성을 억누른다고 생각한다면, 여성해방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 감소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때려쳐라”는 구호가 그냥 폭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미가 있으려면, 계급투쟁을 무시한 채 모든 남성을 도매금 취급하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자본가들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계급과 서민층 남성을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과 동등한 ‘남성 권력’으로 치부할 수 없다. 스물넷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를 과연 이 사회의 특권적 집단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만약 노동계급 남성을 지배계급과 같은 특권적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그들이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과 사용자들에 반발해 싸우고 있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차별받는 여성들이 힘을 합쳐 싸울 수 있는 동맹 세력을 못 보게 돼, 여성운동의 전진에 큰 약점이 된다.

불편한 용기가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했지만 이 운동의 종단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정치적 계기가 생기면 주최 측이 다시 기회를 잡을지도 모른다.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운동이 재개돼도, 운동이 직면한 정치적 문제들이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운동의 성과를 밀거름 삼아 더 전진하려면 이 운동의 약점을 극복할 정치(물론 급진적 좌파적 정치)가 필요하다. 이 정치는 의회나 국가기구와의 협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투쟁을 고무하면서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해방의 전망을 보여 줄 수 있는 정치를 뜻한다. 여성해방과 노동계급의 해방을 연결시키는 진정으로 급진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이 운동에 참가한 젊은 여성들의 활력과 투지는 놀라웠다. 많은 여성들이 이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불법촬영 항의운동은 한국 여성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이 운동에 지지를 보내자. 그리고 이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지를 고민해 보자.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